

교도소 북쪽 117m 구간 빠르면 30일 발굴 착수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어떻게 하나

문화재 발굴 방식 사용 아스팔트 제거 후 트렌치 설치 조사
발굴 착수 후 15일 지나면 유해 매장 여부 확인 가능할 듯
유해 수습 법의학교수 등 참여...행불자 295명 DNA와 대조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이르면 30일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 당시 행방불명자 암매장지 발굴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가매장 시신을 발굴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암매장 발굴 조사는 5·18 이후 처음이다.

재단이 발굴할 암매장 장소는 공수부대 지휘관이 작성한 약도에 나온 교도소 북쪽 테니스장(옛 농장터) 앞 순찰로 117m 구간(폭 3~5m)이다. 해당 지휘관은 이 부지에 희생자 12명을 묻었다고 약도에 메모를 남겼다.

23일 5·18재단과 5월 단체는 광주시 서구 상촌동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발굴 계획과 함께 발굴조사 계기가 된 암매장 약도와 입수 경위, 재조사·3공수여단 부대원 증언 등이 공개됐다.

발굴은 문화재 발굴 방식을 사용해 정밀하게 진행된다. 1992년 신창동 유적을 발굴했던 조현중(전 국립광주박물관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소장과 6·25 합평 양민학살 발굴조사를 전담했던 최인선 순천대 교수가 주도한다.

이들은 현재 암매장지를 덮은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표토층을 3~10cm 제거한 후 일정 간격으로 트렌치(지하 매장물 확인을 위해 뚫는 작은 구덩이)를 설치해 땅속 이상 유무를 살핀다. 과거에 흙을 팠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유해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최소한 암매장 경위는 확인할 수 있다. 기념재단은 발굴 착수 후 15일 가장 지나면 유해 매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해 수습에는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 교수, 윤창록 조선대 임상치의학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DNA 분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신원 확인의 1단계 작업에서는 전남대 법의학교실에 보관 중인 5·18행불자 130가족 295명의 DNA와 일치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5·18재단은 그의 행불자 가족의 DNA도 확인할 예정이다.

유해가 발굴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 5·18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유해 발굴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지검은 가정 5·18 번사체 검사 및 신원확인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배정대 형사3부장



23일 광주시 서구 상촌동 5·18기념재단에서 열린 '옛 광주교도소 5·18 행불자 암매장 발굴조사' 기자회견에서 김양래(맨 오른쪽) 상임이사가 암매장 추정지와 발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검사를 팀장으로, 형사3부 검사 전원을 팀원으로 참여토록 했으며, 5·18기념재단과 관할 경찰서·국과수·지자체·관련 전문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5·18재단은 이곳과 더불어 5·18 당시 재조사, 3공수여단 부대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4~5곳을 더 추가 조사할 계획이

다. 추가 조사에서는 땅 속 10m까지 볼 수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보유한 지중탐사레이더(GPR)를 동원한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발굴조사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발

굴조사는 향후 복원까지 염두에 두고 학술조사에 비금기도록 정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행불자 유족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해 신속히 발굴할 예정으로 이번주까지 법무부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초(30일) 발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교도소 담장 3m 이격 매장...가마니로 시신 2구씩 12명 묻어”

3공수 여단 본부대장의 암매장 진술과 약도 보니

“계엄군이 트럭 1대에 100여명이 가까운 시위대를 차량에 밀어넣기 위해 CS(최루)가스를 터뜨렸다. 가스를 피해 밖으로 몸을 내밀면 대검으로 찔렸다. 시위대는 차량 안쪽으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넘어져 밝혀 죽었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기자회견에서 3공수여단 김모 중령이 1995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1980년 5월 당시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 여단 본부대장이었다. 그는 이번 발굴에 결정적 단서가 된 암매장 약도를 작성한 장본인이다.

그는 검찰 진술 조사에서 “5월23일 오후 6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전남대학교에서 광주교도소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트럭에 100명 태우려 최루가스 밖으로 몸 내밀면 대검으로 찔러” 재조사 증언도 약도 위치와 일치

사망한 3명을 포함해 12구의 시체를 매장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작성한 약도에는 옛 광주교도소 북쪽 외곽에 사각형으로 매장지역이 그려져 있으며 3공수여단 12대대, 15대대, 16대대의 전담 구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돼 있다. 매장 지역은 15대대의 구역이다. 약도에는 또 ‘교도소 담장으로부터 3m 이격 매장’, ‘잡초가 우거졌으며 논과 담, 그리고 500m 전방에 낮은 능선이 있었음’이라고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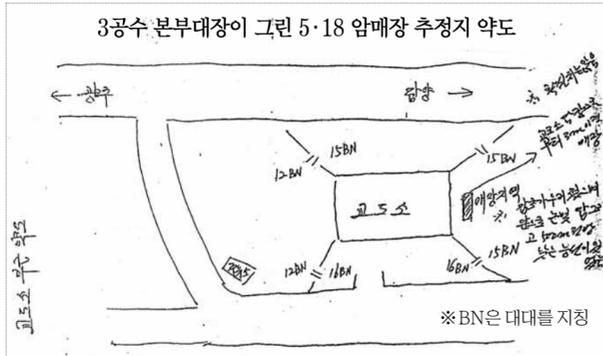
김 중령은 당시 검찰에서 “전남대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해 교도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3명이 밝혀서 사망했다”, “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마니로 시신 2

구씩 덮고 묻었다”고 진술했다.

5·18재단이 이날 밝힌 5·18 당시 교도소 재조사 최모씨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18일 현장답사에 참여한 이 재소자가 지목한 암매장 장소는 김중령이 작성한 약도 속 위치와 일치했다.

예초 1980년 5월18일 출소예정이었지만 계엄이 확대되며 한 달 뒤 출소했다고 밝힌 최씨는 “일반 수인들은 오후 5시면 자기방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1급 모범수들과 함께 생활하며 매일 오후 6~7시 옥상에 올라가 모포를 털거나 빨래를 걸었다”며 “어느 날 같은 시간에 교도소 담장 밖에서 굴삭기가 작업하는 것을 봤다. 두 군데였는데 움푹 들어간 계곡처럼 내려오는 곳이었다. 모범수 사이에서는 시신을 묻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 돌았다”고 증언했다.

3공수여단 15대대 소속 부사관이었던 김모씨도 지난 9월19일 5·18재단에 암매



장 위치를 제보했다. 김씨는 “1980년 5월22일 새벽 전남대에 연행돼 있던 시신 120명을 광주교도소로 이송, 고속도로 방향으로 조준사격해 전복된 차량의 시신을 수습하고 하루 정도 방치했으나 시신 부패로 5~7구를 가매장했다”고 증언했다. 광주 출신인 김씨는 “5·18 당시 사촌동

생이 시민군이었는데 희생을 당했다”며 “이제라도 암매장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있어서 후련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지목한 장소는 5·18 당시 교도소 관사 인근으로, 이번에 발굴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교친구 성폭행범 몰아 2000만원 뜯은 10대들 가담한 학부모도 적발

학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수천만 원을 뜯은 10대 남녀와 이를 말리지 않고 가담까지 한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최(19)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문모(17)군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고교생이던 문군과 최양 등은 지난해 11월 9일 밤 10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K모텔로 친구 이모(18)군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군이 최양을 성폭행했다며 협박하고, 합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구체적인 협박 방법과 배분 금액까지 확정된 문군 등은 이군을 모텔로 불러내 술을 마셨고, 이군과 최양만 놔두고 나간 뒤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다음날 문군은 이군을 불러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최양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군의 부모는 사업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합의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양은 피해자에게 쉽게 금품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뒤 친모 김모(여·48)씨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범행을 말리려는 커녕 오히려 신고하겠다고면서 2000만원 중 1200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문군 등은 이군에게 이른바 ‘호구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구 작업’은 PC방이나 공원에 휴대 폰, 지갑 등을 놔두고 친구를 불러내 이를 가져가게 한 뒤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를 뜻하는 속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손님이 놓고 간 노트북 육십에...

○~50대 숙박업소 업주가 투숙객이 놓고 간 노트북이 고객등록이 된지도 모른 채 수리를 맡겼다가 경찰에 걸렸다.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0)씨는 지난 2월께 장성군 영천리 한 모텔에서 손님인 박모(33)씨가 객실에 두고 간 노트북(50만원 상당)을 7개월 가까이 보관하던 중 지난달 12일 광주시 관광구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완료 문자가 주인 박씨에게 전송되는 바람에 붙잡혔다는 것.

○박씨는 노트북의 존재를 잊고 있었다가 지난달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로 잃어버린 노트북의 수리 완료 문자를 받고선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경찰에서 김씨는 “평소에 갖고 싶었던 노트북을 수개월 동안 고객이 찾가지 않아 서비스센터에서 간단한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하려고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최 선 규 H. 010-3605-5000